

보험업법 시행령

<목 차>

1. 선임계리사 지원조직 제도개선

| | | | | | |
|--------------------|-------------|-------|-------------|-----|--------------------|
|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작 성 자 | 이름 | 김경찬 |
| | 담당부서 (과) | 보험과 | | 직급 | 행정사무관 |
| | 국장 | 신진창 | | 연락처 | 02-2100-2964 |
| | 과장 | 신상훈 | | 이메일 | fsc0457@mail.go.kr |

2023. 02. 13.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 기본 정보 | 1.규제사무명 | 선임계리사 지원조직 제도개선 | | | | | | | | |
|------------|---|---|-----------|-----------------------|-----|--|-----------|------|------|------|
| | 2.규제조문 | 보험업법 시행령 제95조의4 제1항 내지 제5항 | | | | | | | | |
| | 3.위임법령 | 보험업법 제184조의3 | | | | | | | | |
| | 4.유형 | 강화 | 5.입법예고 | 2023.02.14~2023.03.27 | | | | | | |
| 규제의 필요성 |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 IFRS17 시행으로 보험부채 평가, 계리적 가정 적정성 검증 등 선임계리사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선임계리사의 책임 및 권한 등이 강화된 바 이를 지원하는 인력의 구체적인 기준도 설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필요 | | | | | | | | |
| | 7.규제내용 | ○ 보험회사 규모(수입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규모)에 맞는 선임계리사 지원조직 규모를 확보하고, 지원인력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직무교육 점검 의무화 등 | | | | | | | | |
| |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보험회사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보험회사</td><td>53개사</td></tr></table> | | | 유 형 | | 인원수 또는 규모 | 피규제자 | 보험회사 | 53개사 |
| | 유 형 | | 인원수 또는 규모 | | | | | | | |
| 피규제자 | 보험회사 | 53개사 | | | | | | | | |
| 9.규제목표 | ○ IFRS17 시행에 따라 새로운 보험회계 및 계리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선임계리사 지원인력 및 조직 확충 | | | | | | | | | |
| 규제의 적정성 | 10.영향평가 여부 | 기술영향평가 | 경쟁영향평가 | 중기영향평가 | | | | | | |
| |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 | | | |
| |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 ○ 이미 운영하고 있는 지원조직의 인력 구성 및 전문성 등에 대한 기준을 내실화하는 것으로서 행정부담 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보험부채·계리적 가정 검증 등 객관성·전문성이 향상되어 보험산업의 신뢰가 제고되는 편익 발생 | | | | | | | | |
| 기타 | 12.규제일몰제 |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 |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신 설〉</p> | <p>제95조의4(선임계리사의 지원조직)</p> <p>① 법 제184조의3제5항에 따라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를 보조하는 인력(이하 이 조에서 “지원인력”이라 한다)을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이 1조원 이상이며 5조원 미만일 경우 1인 이상의 지원인력을, 5조원 이상이며 10조원 미만일 경우 2인 이상의 지원인력을, 10조원 이상이며 20조원 미만일 경우 3인 이상의 지원인력을, 20조원 이상이며 50조원 미만일 경우 4인 이상의 지원인력을, 50조원 이상이며 100조원 미만일 경우 5인 이상의 지원인력을, 100조원 이상일 경우에는 6인 이상의 지원인력을 추가로 두어야 한다.</p> <p>1. 생명보험업 또는 제3보험업의 경우 : 직전 사업연도말 수입 보험료(재보험료수익을 포함한다)와 책임준비금을 합산한 금액</p> <p>2. 손해보험업의 경우 : 직전 사업연도말 수입 보험료(수재보험료를 포함한다)와 책임준비금을 합산한 금액</p> <p>② 제1항 각호의 금액이 5조원 이상인 보험회사는 다음 각호의 지원인</p> |

| 현행 | 개정안 |
|----|---|
| | <p>력을 두어야 한다. 다만, 재보험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회사는 제1호의 지원인력만을 둘 수 있다.</p> <p>1. 보험 계리업무 5년 이상의 경력자 또는 보험계리사 1인 이상</p> <p>2. 보험상품 개발, 기초서류 검증 등 보험상품 관련업무 5년 이상의 경력자 또는 보험계리사 1인 이상</p> <p>③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와 지원인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연간 교육계획 수립, 이행, 평가 등에 대한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감사 담당 부서가 연1회 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p> <p>④ 선임계리사는 지원인력을 계리 검증 담당자와 기초서류 검증 담당자로 구분하되, 제1항에 따른 최소 지원인력의 1/2 이상을 계리검증 담당으로 지정하여야 한다.</p> <p>⑤ 지원인력은 담당 검증업무의 대상이 되는 실무를 겸직하지 않아야 한다.</p> |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23년 IFRS17 시행으로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등 회계·계리 제도에 큰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보험부채 평가, 계리적 최적가정 설정 등의 적정성을 검증·확인하는 계리업무의 중요성이 증가

○ IFRS17 시행에 맞춰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보험회사 계리업무의 책임자로서 선임계리사의 책임성·권한이 강화된 바,

* 개정 내용(23.7.1. 시행) : 선임계리사가 계리업무 총괄하도록 역할 강화, 선임계리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CEO·CFO 등 겸직 금지 등

⇒ 선임계리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인력(이하 “지원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설정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할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 (대안1) 지원조직 운영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 IFRS17 시행에 맞춰 선임계리사 업무의 인프라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조직을 확대하고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마련

- (대안2) 현행을 유지하는 방안

→ 보험회사가 지원조직 인력 및 자격 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등 현행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을 구성('18.11.27)하고 10차(~'22.8월)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보험업계, 연구기관, 학계 등의 의견 수렴

* 구성원: 금감원, 생·손보험회, 예보, 보험개발원, KDI, 금융·자본·보험연구원, 보험학계 등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IFRS17 시행에 따라 계리업무의 복잡성·중요성이 증가하는 만큼 선임계리사 지원조직을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는 대안1이 바람직

○ 대안2로는 강화되는 선임계리사의 업무에 맞춰 충분한 지원인력의 보강과 전문성의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며,

○ 지원조직에 대한 보험회사의 자체적인 교육 등도 충분히 보장할 수 없는 측면*

* 직무교육참가 실적('20년): 지원조직의 직무관련 교육참가는 1인당 평균 5.9시간으로 신제도(IFRS17, K-ICS)의 변화에 대비하기에는 부족한 수준

⇒ 계리적 최적가정의 산출·검증, 보험부채 시가평가 적정성 확인 등 선임계리사의 확대된 역할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대안1이 필요

3. 규제목표

□ IFRS17 시행에 따라 새로운 보험회계 및 계리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선임계리사 지원인력 및 조직 확충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 보험회사가 이미 운영하고 있는 지원조직의 인력 구성 및 전문성 등에 대한 기준을 내실화하는 것으로서
- 보험회사의 추가적인 비용발생 없으며, IFRS17 도입에 따라 복잡성이 증가한 보험부채 검증업무를 객관적·전문적으로 수행하여 보험산업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등 규제에 따른 편익이 큰 것으로 판단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 영향평가 | | |
|------|------|------|
| 기술 | 경쟁 | 중기 |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 해당 여부 |
|---------------------------|-------|
|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 해당없음 |
| 해당없음 | |
|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 해당없음 |
| 해당없음 | |
|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 해당없음 |
| 해당없음 | |
|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 해당없음 |
| 해당없음 | |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사항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 해외 주요국에서는 지원조직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사례는 거의 없음
- 다만, 주요국의 경우 선임계리사의 권한·책임 및 임원급 직위 등을 고려하면 별도로 지원조직은 정하고 있지 않지만, 충분한 지원조직 및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 구 분 | 해외 주요국의 선임계리사 제도 비교 |
|-----|---|
| 영국 | • 계리업무 전반(actuarial function)을 담당하는 최고계리사(chief actuary)를 선임 |
| 미국 | • 경영진에 최고계리사(chief actuary)를 두고 선임계리사(appointed actuary)도 선임(겸임 가능) |
| 캐나다 | • 이사회·감사와 함께 내부통제의 주축인 대표계리사(the actuary of the company)를 선임 |
| 중국 | • 선임계리사를 계리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고급관리(임원)라고 정의 |

○ 타법사례

-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및 제13조에서는 각각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충분한 경력 등을 갖춘 인력으로 지원조직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 금감원, 보험협회 등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도출한 방안으로
 既협의된 사항임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정부기관 등의 추가적인 행정부담 없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해당사항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 「IFRS17 관련 법규개정추진단」,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회의를 통해 정한 개정안으로 특이사항 없음

2. 향후 평가계획

- ☐ 시행령 시행 전까지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 방안에 반영할 계획

3. 종합결론

- ☐ '23년 IFRS17 시행에 따라 복잡성 등이 증가한 보험부채 검증업무를 객관적·전문적으로 수행하여 보험산업의 신뢰성 제고 가능